

【일반논문】

##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인가?

: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민족주의와 국민의 경계\*

김범수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에 초점을 맞춰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1948년 분단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민국인’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점차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우리 겨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닌 ‘제3의 존재’로 표상되며 ‘우리 대한민국인’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이미지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경계해야 할 대상’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식량난이 불거지면서 ‘우리가 구호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단일민족 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족주의가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북한 주민, 민족정체성, 국민정체성, 남북 분단, 민족주의, 포섭과 배제

---

\* 본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혀둔다 (NRF-2015S1A5A8011407). 더불어 논문을 심사해주시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I. 서론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과 함께 해방을 맞이한 조선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로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 점령 하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으로 수백 년 이상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해 온, 또는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해 온 ‘한민족(韓民族)’은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sup>1)</sup> 그러나 남북 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별개로 한국 사회는 북한 주민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공유하는 ‘우리 대한국민’<sup>2)</sup>으로 간주해 왔는가 아

- 1)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앤더슨(Anderson)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정의한다. 앤더슨에 의하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 ‘인쇄 자본주의(print capitalism)’의 발전은 직접적 상호작용과 대면접촉이 부재한 사람들에게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를 매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해 주었으며 더 나아가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동시성’과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상상의 공동체’로 민족의 등장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본 논문은 이러한 앤더슨의 논의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여 분단 이후 시간이 지나며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들 대한국민’이 헌법 제정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수차례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국민’이 헌법 제정의 주체라는 사실은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3공화국이 출범하며

이면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해 왔는가? 북한 주민의 '국민' 여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어 왔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초점을 맞춰 1980년대와 1990년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상세검색에서 검색어를 '북한 주민' 또는 '북한 동포'로,<sup>3)</sup> 언론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등 3개 신문을 대상으로, 검색 유형은 '기사' 항목 가운데 '사설'로, 검색 기간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인 1980년 9월 1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로 제한하여<sup>4)</sup> 각

---

'우리들 대한국민'이 '우리 대한국민'으로 표현이 바뀐 것을 제외하고) 현행 헌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국민 정체성을 공유하는, 또는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들을 지칭할 때 단순히 법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적자로서의 국민과 구별하기 위해 강조 표시 ' '를 사용하여 '우리,' '국민,' 또는 '우리 대한국민' 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 3) 1948년 분단 이후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이북 동포,' '북한 동포,' '북한 주민'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이북 동포'와 '북한 동포'는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즉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민족적 동질성을 전제하는 용어인 반면 '북한 주민'은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편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검색 결과에 의하면 사용 빈도에 있어 이들 세 용어 가운데 최근까지 신문 기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북한 주민'이라는 용어이며 그 다음으로 '북한 동포,' '이북 동포'의 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 인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논의의 경우 분단 이후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민족적 동일성을 전제하는 '북한 동포,' '이북 동포'라는 용어 대신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그리고 사용 빈도에 있어서도 최근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북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4)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화해

각 428건과 463건의 사설을 검색한 후 이 가운데 수식어나 서술어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사설 약 420여 건을 선정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sup>5)</sup> 특히 본 논문은 이 사설들이 북한 주민을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어휘와 수식 어구를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는지, 반면 ‘우리,’ ‘국민’ 등은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 등이 지칭하는 대상에 북한 주민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배제되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국민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담론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담론 형성 과정에서 북한 주민은 어떻게 배제되어 왔는지 살펴보려고 한다.<sup>6)</sup>

---

협력 정책으로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북한의 안보위협을 지적하며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북한 문제는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정치화되었으며 언론 보도 또한 각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파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햇볕정책’ 이전의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를 대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5) ‘북한 주민’ 또는 ‘북한 동포’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사설 가운데 “북한 주민과의 접촉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와 같이 북한 주민을 단순 언급한 사설은 제외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 “북한 동포는 우리와 핏줄을 같이하는 동족이다” 등 수식어와 서술어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사설들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 6)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분석 방법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의 사설에 나타난 북한 주민의 이미지를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79년 12·12 쿠데타와 1980년 5·17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집권 기간 동안 1980년 11월 12일 언론 통폐합 조치를 시작으로 보도지침 하달 등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기사를 검열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 신문 기사를 살펴보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이후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1988년 5월 15일 창간한 『한겨레』 신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에서, 반면 『경향신문』, 『동아일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에서 남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등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발명(invention)'된<sup>7)</sup> '단일민족 민족주의' 담론은 '한민족'을 수백년 이상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해 온 '단일민족'으로 가정한다.<sup>8)</sup> 이러한 '단일민족 민족주의'의 영향 하에 한국 사회는 1948년 분단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단군의 자손'이며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이라는 '상상'을 공유해 왔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론'을 근거로 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했다.<sup>9)</sup> 그리고 이러한 정부 입장

---

북문제에 접근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 사설 내용이 각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정 정도 편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위의 세 신문뿐 아니라 여타 신문과 방송, 소설,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지면 제약으로 인해 이 시기 한국 사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그리고 현재 기사 검색 서비스를 통해 기사 검색이 가능한 위 세 신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제한적이긴 하나 이러한 고찰은 이 시기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7) '발명된 전통'으로서의 민족 또는 민족주의 담론에 대해서는 Eric Hobsbawm,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in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 1~14 참고.
- 8) '단일민족 민족주의' 담론의 기원에 대해서는 G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 98;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p. 175~182; Henry H. Em, *The Great Enterprise: Sovereignty and Historiography in Modern Korea* (Durham: Duky University Press, 2013), pp. 76~82 참고.
- 9) 이에 대해서는 Bumsoo Kim, "Are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 The Trifurcation of Ethnic National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Syngman Rhee Era (1948-1960),"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4, no. 1 (2019), pp. 153~157 참고.

은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노태우 정부가 북한의 국가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공식 입장과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분단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점차 벌어지고 있다. 실례로 김범수의 연구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이승만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분단으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 포함하는 새로운 경향이 이미 1948년 분단 직후부터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음을 당시 신문기사 자료를 근거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sup>10)</sup> 또한 강원택의 연구는 2005년과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북한과 별개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국가정체성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민족정체성과 분리되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원택이 인용한 2005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한은 별개의 독립국가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02명 가운데 79.4%에 달하는 796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0.6%에 해당하는 206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이 ‘남’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질문에는 21.7%의 응답자가 ‘남’이라고 응답하였다.<sup>11)</sup> 비슷한 맥락에서 2010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한은 별개의 독립국가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19명 가운데 80.4%에 달하는 819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9.6%에 해당하

<sup>10)</sup> Ibid., pp. 159~163.

<sup>11)</sup>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 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pp. 27~30.

는 200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이 '남'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질문에는 44.4%의 응답자가 '남'이라고 응답하였다.<sup>12)</sup> 강원택은 이처럼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고 북한 주민을 '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설명한다.<sup>13)</sup>

한편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 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14)</sup>

- 
- 12)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pp. 20~25.
- 13)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p. 38;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pp. 30~31.
- 14) 실레로 신미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5권 2호 (2009), pp. 119~143; 윤인진·채정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2호 (2011), pp. 129~153; 손애리·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권 3호 (2012), pp. 5~34; 윤인진·송영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 『재외한인연구』, 제30호 (2013), pp. 7~40; 최윤희·김수연,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 준 적이 없어요: 댓글에 나타난 남한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공 PR의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15권 3호 (2014), pp. 187~219; 박혜량, “인터넷 기사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추이와 영향요인 분석,” 『커뮤니케이션과학』, 33권 1호 (2017), pp. 53~72; 정진아,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 <남북청년통일실험-어서 오시라요>에 대한 악성댓글 사건,” 『민족문화연구』, 76권 (2017), pp. 281~311; 김기동 외 5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제2호 (2018), pp. 1~36; 정동준,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국민정체성,” 정동준 외 8인,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p. 164~191 등의 연구를 참고.

이들 연구들은 주로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와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의 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이탈 주민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지, 사회적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 북한이탈 주민을 남한 주민과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실례로 강원택이 인용한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2010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019명 가운데 27.2%가 북한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44.2%는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라고, 23.2%는 ‘남에 가깝다’라고, 5.5%는 ‘완전 남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 1,019명 가운데 43.9%가 북한이탈 주민을 ‘북한출신 남한주민’으로, 42.9%가 ‘북한사람’으로, 11.2%가 ‘남한사람’으로, 1.2%가 ‘동포’라고 응답하였다.<sup>15)</sup> 비슷한 맥락에서 윤인진 외 7인이 2014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011명 가운데 48.2%가 북한이탈 주민을 ‘북한사람’으로, 33.3%는 ‘북한출신 남한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3.7%에 불과하였다.<sup>16)</sup> 이러한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국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서 점차 벌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1980년대와 1990년대 당시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자료, 특히 계

15)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pp. 16~19.

16) 윤인진 외 7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4), p. 108.



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 자료 등이 부재하다는 점을 주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문 사설을 통해 1980년대와 1990년대 당시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1989년 여름 폴란드를 시작으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해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냉전 질서 해체,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와 뒤이은 북핵 위기,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 국내적 차원에서는 1987년 '6월 항쟁'을 시작으로 1990년대로 이어지는 민주화와 대중적 통일운동의 확산 등 1948년 분단 이후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냉전적 분단체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와 '그들',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부터 살펴보자.

## II.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 요건과 관련하여 제3조에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 수립 이후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민 요건을 규정하고자 <국적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48년 12월 20일 <국적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하였다. 첫째,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둘째,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셋째,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넷째,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sup>17)</sup> 그러나 동 〈국적법〉을 포함한 당시 어떠한 법률도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국적 및 법적 지위에 관해 별도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 주민의 국적 및 법적 지위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이 1948년 12월 12일 총회에서 이러한 헌법 규정을 갖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법 규정 여부에 상관없이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sup>18)</sup> 즉 북한 ‘괴뢰 정부’가 불법적으로 우리 영토를 점령하고 있어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4319&ancYd=19481220&ancNo=00016&efYd=194812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18) 1948년 12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는 12월 12일 대한민국을 ‘한국내의 유일한 정부’로 선언한 결의안(유엔총회 결의안 제195호)을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채택하였다. 특히 본 결의안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한 모든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그렇게 성립된 한국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Declares that there has been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sup>19)</sup>

이승만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헌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이 지난 70여년 간 9차례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제3조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 또는 외교적 이유로 기존 입장을 변경할 수는 없었다. 특히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적대적 체제 경쟁에 매달린 상황에서 반공주의를 주요 통치이념으로 활용한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의 범

---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본 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한 이후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위 결의안을 근거로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괴뢰 정부'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국가로서의 실체를 부정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였다. 국가기록원,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과 한국위원단 설치," <http://theme.archives.go.kr/next/unKorea/approvalKorea.d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https://undocs.org/en/A/RES/195\(III\)](https://undocs.org/en/A/RES/195(III)) 참고.

<sup>19)</sup> Kim, "Are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 pp. 153-157.

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여 년 간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상당 부분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영토 조항을 근거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실례로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소위 〈6·23 선언〉을 통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제4조), “국제 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 북한과 함께 국제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제5조)라고 밝히는 등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결코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20)</sup> 김종필 국무총리 또한 1973년 6월 26일 국회 답변에서 〈6·23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은 변할 수 없으며,” “헌법 규정이나 영토 규정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답변하였다.<sup>21)</sup>

비슷한 맥락에서 노태우 정부 또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1991년 9월 17일)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년 12월 13일)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합의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하였다.<sup>22)</sup> 즉 국제적으로는 남

20) “다수회원국이 원하고 통일에 장애 안되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않아,” 『동아일보』, 1973년 6월 23일.

21) “북한의 「고려연방제」 제의는 선전,” 『동아일보』, 1973년 6월 26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등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 관계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헌법 상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다.<sup>23)</sup>

한편 이러한 정부 입장을 반영하여 법원 또한 지난 수십 년 간 여러 판결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였다.<sup>24)</sup> 특히 북한 국적자로 중국에 거주하다 199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영순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1996년 11월 12일 다음과 같이 북한 국적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최종 확정 판결하였다.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 이영순은 1937년 3월 17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조선인 부모의 딸로 출생하여 분단으로 북한 지역에 거주하다 1960년 중국으로 건너가 1961년과 1979년 각각 한국계 중국인과 결혼하였다. 이후 1992년 중국인 남편과 함께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을 30일로 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1992년 9월 1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93년 말 중국인 남편은 한국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강원도 화천군의 숙모와 사촌 형제를 만나 남한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하여 1994년 4월 9일 남대문 경찰서에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다. 정부는 그러나 원고가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외국인으로 보아 출

22) “남북합의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국가 관계 아닌 ‘특수관계’ 선언,” 『한겨레』, 1991년 12월 14일.

23) 이효원, “남북한 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2011), pp. 4~6.

24) Ibid., pp. 6~7.

입국관리법 위반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내렸고 서울 외국인보호소로 인계하였다. 이후 외국인보호소 책임자는 원고에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서울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도록 보호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4년 5월 26일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중국에 거주하던 1977년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았고 1987년에는 중국정부로부터 1997년 3월 1일까지 유효한 외국인거류증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조선인을 부(父)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비록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sup>2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는 우리 정부가 지난 70여 년 간 헌법의 영토 조항과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론’을 근거로 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어떠하였는가? 이하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신문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자.

<sup>25)</sup> 대법원,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 Ⅲ. 전두환 정부 시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을 통해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이후 전두환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발생한 정통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적극적이었으며 다양한 대북 제의를 내놓았다.<sup>26)</sup> 실례로 1981년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남북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을 제의하며 김일성 주석 서울 초청을 발표하였고, 1981년 3월 3일 제5공화국 정식 출범 이후 6월 5일에 열린 제1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어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5공화국의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 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 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후 민족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 1982년 2월 1일 국토통일원장관 성명을 통해 ‘20개 시범실천사업’을, 2월 25일에는 남북고위대표회담을 제의하였고, 1983년 2월 1일에는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회담 제의는 북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랭군 테러사건으로 서석순

26) 심지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통일정책,” 『통일시론』, 7월호 (1999), p. 175.

27)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1년』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91~96.

부총리와 정부요인 등 17명이 사망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1984년 9월 남한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제의한 수해복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어 1984년 11월 15일 남북경제회담이, 11월 20일 적십자회담 예비접촉이 개최되었으며 1985년 들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88올림픽 북한대표팀 참가 협의를 위한 체육회담 등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담들은 구체적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북한은 결국 1986년 1월 20일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모든 남북 회담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접어들어 상황에서 1986년 10월 30일 이규호 건설부 장관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관련한 대북 성명을 발표하며 금강산댐의 갑작스런 방류가 서울을 포함한 하류지역의 홍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sup>28)</sup> 이후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1987년 2월 28일에는 금강산댐의 수공에 맞서기 위한 ‘평화의 댐’ 기공식이 열렸다. 한편 1987년 12월 16일로 예정된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87년 11월 29일에는 북한의 테러 공작에 의한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하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기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당시 신문 사설을 통해 살펴보자.

우선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0년 9월 1일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 ‘북한 주민,’ ‘북한 동포,’ ‘6천만 겨레’<sup>29)</sup> 등 북한 주민을 지칭하는 용

28) “북괴 금강산댐, 안보에 중대 위협,” 『경향신문』, 1986년 10월 30일.

29)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6월 5일 제1차 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하며 ‘6천만 겨레’라는 표현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분단 36년에 중지부 찍자”라는 제목의 1981년 6월 5일자 『경향신



어를 수식어나 서술어와 함께 사용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사설의 수는 『경향신문』 96건, 『동아일보』 44건을 포함하여 총 14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사설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 주민을 국민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명시적으로 지칭한 사설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남북한 간 냉전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 사설의 대부분은 북한 체제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비판하는 가운데 '북괴,' '북한,' '북한 사회,' '북한측,' '북한 당국,' '북괴 집단,' '북한 집단,' '김일성 왕조체제,' '북한 김일성 집단,' '김일성 독재집단,' '김일성 집단,' '북한 공산집단' '북한 공산주의자' 등을 '그들'로 호칭하며 '우리,' '우리 한국 사회,' '우리측,' '우리쪽,' '우리 모두,'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온 국민,' '국민 모두,' '우리 국민 모두' 등과 대비시킴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우리'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사설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아닌 '제3자'로 표상되고 있다. 실례로 "6.25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1983년 6월 24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북한 주민을 배제하고 있다.

3년 1개월 동안이나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인 민족상잔으로 남한에서 희생된 사람만 해도 2백여만명에 달했다. ... 37개월의 전쟁 동안 전라북도 전

---

문』 기사에 의하면 "이날 열린 제1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계기로 우리 동포의 공칭 숫자는 종전의 '5천만' 또는 '5천 5백만'에서 '6천만'으로 확대 호칭하기로 결정"하였다. "평통 사무처 측은 현재 한민족의 숫자는 남한 3천7백 60만, 북한 1천7백30만, 그리고 북미 60만(미국 56만 8천), 亞洲 68만(일본 60만 5천), 중국 1백90만(74년簡明中國地理), 소련 38만 9천, 歐洲 3만(중동 제외), 중남미 2만 등 모두 5천 8백만명이기 때문에 6천만으로 약칭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6천만 겨레,' '6천만 동포,' '6천만 민족'이라는 표현은 남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 사회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체 도민만한 **우리의 국민**이 전투행위 과정에서 사망하였거나 실종 또는 공산주의자들에 학살되거나 부상을 당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인명피해 말고도 한국이 물질적으로 입은 재산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 **그밖에 북한 주민의 희생과 재산피해 또한 남한에 못지않게** 처참하고 엄청나다. ... 3년 1개월 간의 전쟁 중 **모든 국민**이 바랐던 것은 작렬하는 폭탄 속에서 살아남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끌려가거나 학살당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후 속에 살아남은 **우리 생명들**은 전후의 가난과 싸우기 위해 또 한 차례 처절한 삶의 투쟁을 벌여야 했다. ... 이제 **우리 국민**은 전후 30년 동안의 피땀 어린 삶의 투쟁 끝에 전쟁의 상처를 씻고 후진국을 벗어나 중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헐벗고 굶주림 속에 이룩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또 다시 **김일성 집단**에 의해 탈취당할 수는 없다.<sup>30)</sup>

이 사설에서 ‘우리’ 또는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 집단’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전후 가난과 맞서 싸우며 ‘오늘’의 성취를 함께 이룬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북한 주민’은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로 언급은 되고 있으나 ‘우리가 아닌 ‘제3의 존재’로 표상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내내 남북한 간 적대적 대립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은 단순한 제3자로서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되곤 하였다. 실례로 “북괴의 가증할 대남책동”이라는 제목의 1981년 6월 4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우리 어부들을 잡아다가 세뇌시켜 대남적화 전략의 한 방편으로 이용해 보려고 노골적으로 회책한” “북괴”를 비판하며 “오직 하나의 목표와 의무만 오랫동안 주입당한 북한

30) 이하에서 인용하는 신문기사는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원문의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수정하였으며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반면 철자법의 경우는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으면 원문에 나온 철자대로 인용하였다. 강조와 중략 표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필자가 강조하고 생략한 것임을 밝혀둔다.

주민”들에 대해서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설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이란 비인간적 수괴를 위해 **북한동포들은** 바깥세계의 동향을 까맣게 모른채 오직 **전쟁준비에** **혹사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그런 폐쇄사회 속에서 **오직 하나의 목표와 의무만 오랫동안 주입당한 북한주민들에게** 그 불만의 돌파구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북괴집단이** 재침의 불을 당길 경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북괴의** 실상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그들에게** 재침의 구실을 줄 어떠한 내부 혼란도 조성되지 않도록 거국적으로 결속해야 할 것이다. ... 9개월간의 세뇌교육과 회유책에도 **우리 어부들의 애국심에** 하등의 변화도 없었듯이 **지금 우리 국민의** 반공의지와 안보의식은 철석같은 것임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이 사설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반면 ‘그들’은 ‘북괴’ 또는 ‘북괴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국민’과 ‘북괴’가 ‘우리’와 ‘그들’이라는 대립 구도의 기본축을 형성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은 ‘북괴’에 의해 “바깥세계의 동향을 까맣게 모른채 오직 전쟁준비에 혹사당하고 있는” 피해자로 표상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의 목표와 의무만 오랫동안 주입”당했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전쟁 등이 다시 발발할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계에 이른 북한 주민의 참상”이란 제목의 1984년 8월 9일자 『경향신문』 사설 또한 북한 주민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북한 주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비참한 인민군 생활을 견디다 못해 귀순했다』 지난달 28일 맨몸으로 헤엄쳐 자유대한으로 귀순한 전 북괴군 조병찬 하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한마디는 북한의 현실상을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하사는 9일 기자회견

전에서 ... 김정일 세습체제에 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 경제난 등을 증언했다. ...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그들의** 참상을 측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 조병사가 폭로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상도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 조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각종 통제와 생활고에 시달려 성격이 거칠고 신경질적이며 전투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주민들의 성격 결함은 언제 어떤 군사모험주의로 돌변할지 모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이 시기 몇몇 사설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에 대해 ‘동포’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실례로 “사회응집력 한층 더 굳혀야할 때”라는 제목의 1985년 9월 2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난주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우리는** 12년 만에 북한 사회의 내막을 편린이나마 다시 보게 되었다. ... 평양에서의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재확인된 이 같은 북한사회의 본질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사고**, 그리고 국내사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세에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 **우리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주민들은 같은 동포이므로 만나서 대화하면 곧 정이 통할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북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 백두산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생각한다거나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사고경향이다. 이번에 확인된 북한사회의 불변한 본질과 더욱 강화된 전체주의 체제는 **우리 사회**의 식자층이나 대중들의 북한에 대한 낙관적이고 감상적인 사고경향을 부분적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대결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북한의 효율적인 주민 동원능력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처럼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된 채 때때로 ‘우리가

경제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다른 민족으로 표상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위 사설은 북한 주민을 “같은 동포”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외에 “미하원의 북한 청문회”라는 제목의 1980년 10월 4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우리들과 핏줄을 같이하고 있는 동족”으로, “북한 「로동당」 전당대회”라는 제목의 1980년 10월 10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조상을 함께 한 동족”으로, “북괴의 서울올림픽 저지 책동을 봉쇄하자”라는 제목의 1981년 10월 21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으로, “남북경제회담 제의에 반대할 이유없다”라는 제목의 1984년 10월 12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한 핏줄 동포”로 지칭하는 등 여러 사설에서 '우리'와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주목할 만한 표현이 '6천만 겨레'라는 표현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6월 5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고 이후 '6천만 겨레,' '6천만 동포,' '6천만 민족'이라는 표현은 남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 사회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47건의 사설이 '6천만 겨레'(32건), '6천만 민족'(6건), '6천만 동포'(4건) 등의 표현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개천절의 교훈 - 「홍익인간」의 참뜻 되새기자”라는 제목의 1985년 10월 3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우리 6천만 동포”라는 표현을, “중공 전투기 북한 제공 - 북한은 군비 경쟁 말고 남북대화 응해야”라는 제목의 1982년 9월 20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포함한 3건의 사설은 “우리 6천만 겨레”라는 표현을, “북한 탁구의 서울 초청”이라는 제목의 1982년 7월 23일자 『동아일보』 사설과 “「평통」 제2차 전체회의”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은 “6천만 우리 겨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주민이 '우리 겨레'의 일원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중공 전투기 북한 제공”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을 구별하고,

전자를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우리’의 범주에서는 배제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이 ‘우리 6천만 겨레’의 일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한해에 20대 이상의 전투기를 들여온다면 한국도 응당 공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남북한의 군사력 경쟁만을 촉매할 따름이고 그 부담은 **우리 6천만 겨레**가 짊어져야 한다. 군사력 경쟁은 민족적 부담 증대로 전가되고 만다. ... **북한은 인구로 보아 한국의 절반 밖에 안되는데다 국민총생산이 한국의 3분의 1도 못된다.** 국민총생산이 **우리의 3분의 1도 못된다**는 것은 이미 **북한 주민 1인당 군비 부담이 남한 주민보다 세배 이상 더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북한 주민을 ‘우리 6천만 겨레’의 일원으로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우리’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경향은 이 시기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4천만 인구의 83년”이라는 제목의 1983년 1월 4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6천만 동포’와 남한에 거주하는 ‘4천만’을 구분하고 후자만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사설에 의하면

83년 1월 1일 영시 현재 **남한 인구가 3천9백64만1천명** ... 오는 8월 1일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명** 선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 44년 해방 직전의 인구가 남북한을 통틀어 2천5백12만명이었으니까 그동안 인구가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지금 북한의 인구가 약 1천9백만명이므로 한반도의 인구는 **해방 당시의 「2천만동포」**에서 이제 **「6천만동포」**에 이르렀다. ... 올해 **우리나라 인구 4천만명** 선의 돌파를 계기로 인구 폭발의 영향에 대한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가다듬어야 할 단계에 와있는 것이다.

이외에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약 40여 건의 사설이 ‘우리 국민’이 ‘4천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례로 “비극 딛

고 일어서는 용기”라는 제목의 1983년 10월 11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랭군 테러사건 직후 북한에 대한 “분노와 비통을 국가 발전의 활력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4천만 우리 국민’을 언급하고 있다.

KAL기 격추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랭군 폭발사건이라는 엄청난 강타를 얻어맞은 **국민**의 심정은 한마디로 망연자실 바로 그것이다. 잇따라 발생한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심장을 파멸시킬 것만 같은 분노와 비통이 **4천만 국민**의 가슴속에 가득 차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우리는** 이 분노와 비통을 이성으로 다스리면서 **저들의** 만행을 응징하고, **저들의** 만행을 방지할 대책을 올바르게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분노와 비통은 **우리 국민** 이외의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거나 달래줄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당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만행도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해서 응징해줄 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 **4천만 우리 국민**은 분노와 비통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두 손으로 안고 **국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어 이 어려운 국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는 이 시기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을 ‘6천만 우리 겨레’의 범주에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4천만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는 배제하였음을, 즉 ‘우리 겨레’이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제3의 존재’로 표상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체성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분단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과 분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 즉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 집단’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전후 가난과 맞서 싸우며 오늘의 성취를 함께 이룬, 그리고 1980년대 계속된 북괴 도발에 맞서 함께 싸우고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았음을 드러내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분리 양상이 노태우 정부 시기 들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 IV. 노태우 정부 시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98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산권 국가들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북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실례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4월 21일 취임 뒤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협력시대’ 개막을 선언하였고, 7월 7일에는 남북교류 적극 추진과 소모적 경쟁·대결 외교 종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후 후속 조치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남북학생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교육당국자 회담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대신 북한의 제의로 1988년 8월부터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접촉을 시작하였으나 이 또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12월 7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였다.<sup>31)</sup> 이처럼 당국 간 대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1989년 1월 19일 북한의 초청을 받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을 전격 허용하였고 정주영 회장은 열흘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2월 2일 북한과 금강산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3월 20일 작가 황석영의 방북을 시작으로, 문익환 목사(3월 25일), 전대협 대표 임수경(6월 30일),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7월 25일)가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며 민간차원에서의 대북교류와 통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접촉 ‘창구단일화론’을 주장하며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이들을 처벌하는 등 한동안 ‘공안정국’이 이어졌다.<sup>32)</sup>

31)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1년』, pp. 118~125.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6월 4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소수교에 합의하였다. 또한 1990년 7월 20일에는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남북한 전면개방 및 자유왕래를 실현하자”고 제안하였으며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간의 무력포기 선언과 불가침 협정의 체결,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서울과 평양에 상호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논의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90년 9월 4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sup>33)</sup> 북한의 연형묵 총리는 단장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9월 6일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이처럼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1990년 9월 22일 남북은 북경아시안게임 공동응원단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를 발표하였다. 이어 10월 11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제1차 남북통일 축구대회가 개최되었고 10월 23일에는 서울에서 제2차 남북통일축구대

32) 이정철,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2012), pp. 143~144.

33) 1990년 9월 처음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은 이후 1992년 9월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총 8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은 10월 16일 평양에서, 제3차 회담은 12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4차 회담은 1991년 10월 22일 평양에서, 제5차 회담은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6차 회담은 1992년 2월 18일 평양에서, 제7차 회담은 5월 5일 서울에서, 제8차 회담은 9월 18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제6차 회담에서는 합의서 문건이 교환되고 발표되는 등 본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199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제9차 회담이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으로 무산되고 1993년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핑계로 모든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 한동안 남북고위급회담은 중지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북총리회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318>

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뉴욕에서는 남북영화제가 개최되었으며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는 17명의 남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범민족통일음악회가 개최되었다.<sup>34)</sup>

이어 1991년 1월 15일 제2차 남북체육회담에서는 1991년 4월 일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릴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4월과 6월 남북단일팀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이처럼 화해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한은 1991년 7월 8일(북한)과 8월 5일(남한) 각각 유엔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 최종 승인되었다. 또한 12월 13일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남북한은 상호 체제 인정과 내부 문제 불간섭, 상호 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sup>35)</sup> 더 나아가 남북한 당국은 12월 31일 남북고위급회담 핵문제협의를 위한 제3차 대표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2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실천에 옮겨 '7천만 한민족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1월 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본격적인 '남북공존 공영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남북한 관계가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으로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달라진 노태우 정권 시기에 초점을 맞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당시 신문 사설을 통해 살펴보자.

34)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1년』, pp. 142~147.

35) Ibid., pp. 149~159.

우선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기간 동안 '북한 주민,' '북한 동포,' '6천만 겨레,' '7천만 겨레'<sup>36)</sup> 등 북한 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를 수식어나 서술어와 함께 사용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사설의 수는 『경향신문』 38건, 『동아일보』 50건, 『한겨레』 53건을 포함하여 총 141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 주민을 간접적으로 '국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사설은 다음 4건의 사설이 있다. 첫째, "통일각의 냉기류"라는 제목의 1988년 12월 30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예비접촉"이 "크게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동질성 회복과 작게는 남북대결의 완화와 종식을 통해 이 땅에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6천만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

36) 이 시기 남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6천만 겨레'와 함께 '7천만 겨레'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되었다. 이 표현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검색 결과에 의하면 '7천만'이라는 용어가 신문 기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각 정당의 신년 단배식 소식을 전하는 "총선 승리 다짐 단배식 - 활기찬 정초 정가"라는 제목의 1988년 1월 4일자 『경향신문』 기사가 최초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당시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신년 단배식에서 "개인에게는 좌절과 체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7천만 국민에게는 결코 영원한 패배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7천만 국민'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1988년 5월 15일 『평화신문』의 창간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7천만 겨레'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후 1989년 29건, 1990년 48건의 기사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1989년 3월 25일 북한을 방문한 문익환 목사는 북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주체사상탑을 견학하며 방명록에 "7천만 겨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두 모두 주인이 되는 주체사상 만세"라고 서명한 사실이 나중에 안기부 수사발표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다. "「문익환 목사 입북」 수사결과 발표문 요지," 『경향신문』, 1989년 5월 2일. 이어 1990년 5월 9일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의 첫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이 총재 취임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내외 7천만 겨레 모두에게 민족사의 오랜 소망을 실현할 굳건한 주도세력이 뭉쳐졌음을 알리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7천만 겨레'라는 표현이 한국 사회에 널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첫 전당대회," 『동아일보』, 1990년 5월 9일. 이후 이 표현은 한동안 '6천만 겨레'와 함께 병행 사용되었다.

고 주장하며 “팀스피리트 중지”를 추가 의제로 요청한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둘째, “충격과 소모를 줄이자 균형감각 잃은 통일논의는 백해무익”이라는 제목의 1989년 3월 28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문익환 목사의 ‘돌연한 방북’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6천만 국민’을 언급하고 있다.

6천만 우리 겨레 중에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 남한쪽에서는 최근 수십년간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 이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 이처럼 우리 6천만 국민이 바라는 통일논의는 남북간의 균형 있는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문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셋째, “한국동란 40주년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1990년 6월 24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한국전쟁 40주년을 맞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 통일은 40년 전에 기도했던 무력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화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통일이어야 함을 6천만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넷째, “통일의 첫걸음 「남북단일팀」 합의”라는 제목의 1991년 2월 14일자 『한겨레』 사설은 1991년 2월 12일 열린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 합의를 “7천만 국민 모두가 흐뭇해 할” 합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4건의 사설이 ‘6천만 국민’ 또는 ‘7천만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을 ‘국민’의 일원으로 표상하고 있으나 이 4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설은 이전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기와 마찬가지로 ‘6천만’, ‘7천만’이라는 표현은 ‘겨레’, ‘민족’, ‘동포’ 등과 결합하여 남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를 모두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반면 ‘국민’ 또는

‘우리 국민’이라는 표현은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sup>37)</sup> 특히 몇몇 사실들은 ‘4천만 국민’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주민을 포함하는 ‘6천만 겨레’ 또는 ‘7천만 겨레’와 북한 주민을 배제한 ‘4천만 우리 국민’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sup>38)</sup> 실례로 “전대협이 물지각한 행동”이라는 제목의 1989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사실은 평양축전에 대표로 임수경을 파견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회의 ‘물지각한 행동’을 비판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대협은 임 양의 평양행이 “비공개적이었으나 **7천만 겨레**의 통일 염원을 담은 정당한 행위이며 ... 모든 대화의 교류 장구를 봉쇄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라 했다. **남한에 거주하는 4천만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비원을 안고 사는 것은 사실이나 여대생 1명을 전대협 대표로 평양에 보내 북한 당국의 대남공작의 마수 앞에 노출시키는 것을 통일운동이라 생각하는 지각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헤아려 보라.<sup>39)</sup> ... 북한이 안팎의 어려움을 무릅

37)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남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기 위한 표현으로 ‘6천만’을 언급한 사실의 수는 『경향신문』 5건, 『동아일보』 15건, 『한겨레』 10건 등 약 3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4건은 ‘민족’, 10건은 ‘겨레’, 2건은 ‘동포’, 1건은 ‘민중’, 또 다른 1건은 ‘대중’과 함께 ‘6천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3건은 ‘국민’과 함께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1건의 사실은 ‘겨레’와 ‘국민’에 중복 사용). 한편 동일한 용도로 ‘7천만’을 언급한 사실의 수는 『경향신문』 7건, 『동아일보』 12건, 『한겨레』 36건 등 약 55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37건은 ‘겨레’, 8건은 ‘민족’, 5건은 ‘동포’와 함께 ‘7천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1건은 ‘국민’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별다른 표현 없이 ‘7천만’을 사용한 사실이 4건 있다.

38) 이 시기 『경향신문』 8건, 『동아일보』 4건, 『한겨레』 2건 등 14건의 사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4천만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2건의 『한겨레』 사실은 ‘4천만 민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약 16건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실이 ‘4천만’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39) 전대협은 1989년 6월 29일 임수경을 전대협 공식대표로 평양청년학생축전에 파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임씨의 평양행은 비공개적이었으나 **7천만 겨레**의 통

쓰며 평양축전을 강행하고 **우리측** 정부를 상대치 않고 전대협만을 굳이 골라 초청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저들의 대남공작의 변용된 전략이다.

이처럼 이 시기 신문 사설에서 남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6천만 겨레,’ ‘7천만 겨레’라는 표현을, 반면 남한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4천만 국민’이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이전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기와 마찬가지로 분단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 사회 내부에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이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 겨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제3의 존재’로서 북한 주민은 이 시기 한국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두환 정권 시기 신문 사설에 나타난 북한 주민의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김일성 왕조 체제’ 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며 ‘전쟁준비에 흑사당하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남북한 간 적대적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에게 위협

---

일염원을 담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통일을 바라는 **4천만 국민**은 전대협의 평양축전 대표 파견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과정을 구국 통일의 단심으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전대협 ‘축전’ 대표 평양 파견,” 『한겨레』, 1989년 6월 30일. 이후 임수경은 1989년 8월 15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국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남과 북의 7천만 겨레**, **남녘의 4천만 국민**’을 언급하며 자신의 방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임양 판문점 통과 연설 요지,” 『경향신문』, 1989년 8월 16일. 한편 1992년 5월 25일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김대중 대표는 대통령후보 연설에서 “일생을 **4천만 국민과 7천만 민족**을 위해 싸웠는데 이유 없이 지역감정 때문에 배척받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민주당 달아오른 ‘경선축제,’” 『한겨레』, 1992년 5월 26일. 이러한 언급들은 당시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7천만 겨레’와 ‘4천만 국민’을 구분하는 인식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될 수 있는 존재이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되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이미지는 그러나 노태우 정권 시기 들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화해 무드가 계속되면서 점차 변하게 되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7 선언>을 통해 남북한 간 기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sup>40)</sup>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이미지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에서 '민족공동체의 동반자'이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점이 점차 변하게 되었다. 실제로 "민족공동체 의식의 확인"이라는 제목의 1988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7.7 선언>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적이 아니다.** 대결하고 봉쇄 고립화할 대상이 아니다. **남북은 적대관계 아닌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북의 주민은 같은 민족이다. **우리와 더불어 잘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일부이다.** 남과 북의 민족 전체가 번영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끝내는 합쳐져야 한다. 한 역사 한 문화를 가졌던 한 겨레로서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의 아픔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 동반자 관계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확인한 것이 7일 발표된 노태우 특별선언이다.

물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적'에서 '동반자'로 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을 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의 1988년 7월 26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당시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에 대해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북한에 대한

40) "7.7 특별선언' 전문," 『한겨레』, 1988년 7월 8일.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6.25체험 세대가 보수 반공의 시각에서 북한을 「폐쇄적인 병영사회」로 인식하고 의혹의 시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반해 젊은 세대는 북한을 「주체」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떠나 「한겨레」 「민족공동체」의 차원에서 수용하려는 경향이 짙다. ... 민족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부분은 사실대로 인정해주는 아량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 북한 사회의 생활관습 기저에는 그런대로 전통적 문화 관습이 깔려있고 이질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적 요소는 강하며 이데올로기의 외피 바로 아래엔 민족적 동질성이 엄존한다는 지적들은 결코 목살해서는 안 될 선의의 충고가 아닐 수 없다. ... 한때 우리가 「침략자」로 규정했던 중국 과도 관계 개선을 하고 직거래를 트게 된 오늘 민족공동체의 반쪽 구성원인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만을 고수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남북화해를 하자는 마당에 이윤배반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한동안 한국 사회에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9년 문익환 목사, 임수경 전대협 대표, 문규현 신부의 잇따른 방북으로 촉발된 공안정국으로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사설을 통해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실례로 “실낙원의 「낙원」 신앙”이라는 제목의 1989년 7월 5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북한 주민의 99%가 자신들이 「지상낙원」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소개하며 “세상의 물정을 잘 모르는” 북한 주민을 “우물 안 개구리 중의 개구리”에 빗대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사설들이 동유럽의 민주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폐쇄사회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 외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우물 안 개구리 신세로 전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인간회복의 남북관계를”이라는 제목의 1990년 10월 25일자 『



동아일보』 사설은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열린 남북통일축구대회를 통해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며 경험한 남북한 주민 사이의 “골 깊은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접촉과 교류는 의의가 있었다. ... 각각 **남북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10월의 행사는 값진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픔을 느낀다. **골 깊은 이 엄청난 차이**를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좁혀 갈 것인가. ... 인민이라고 해도 좋고 국민이라고 해도 좋다. 근본적인 것은 나라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었다. ... **수령님과 당의 뜻과 교시에 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는 인민**과 스스로의 뜻에 따라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는 국민의 차이, 바로 그 차이를 우리는 목격했다. ... **우리는 「어버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부동한 신념체계로 돼버린 북한 인민들의 모습을 보고 오직 놀라고 측은함을 느낄 뿐이다.**

반면 『한겨레』는 “시드니의 합창은 단일팀 구성의 이념”(1989년 4월 4일), “남북대결 뛰어넘은 ‘남북주먹’의 화합”(1989년 8월 4일), “동족을 포용하는 통일정책 세워야”(1989년 8월 17일), “베이징 하늘에 ‘아리랑’이 울리게”(1989년 10월 22일), “큰 민족 한 나라의 90년대로”(1990년 1월 1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질서’ 냉전체제는 북한과 함께 깨뜨려야”(1990년 6월 7일), “이제 ‘통일의 껍데기’들은 모두 가라”(1990년 8월 8일) 등 여러 건의 사설을 통해 진보적 입장에서 ‘남북한은 한겨레’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가 포용해야 할 ‘동족’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신문사의 이념적 입장에 따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사설에 표상된 이미지도 차이가 있었지만 1990년 9월 4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통일축구대회, 범민족 통일음악회, 송년음악회 등 남북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특히 1991년 4월

29일 일본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이 우승한 후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이 8강에 진출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자 북한 주민을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실례로 “코리아 탁구, 세계를 제패하다”라는 제목의 1991년 4월 30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남북한이 협력할 경우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번 세계제패를 성취해낸 선수들도 울었고 재일교포들도 감루를 흘렸고 멀리서 성원을 보내던 7천만 동포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는 또한 남북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치고 다지면 막강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스포츠 · 정치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1991년 5월 1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스포츠 교류가 “근본적인 남북화해”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통일 탁구」 여자팀이 세계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곳에는 남과 북이 따로 없었다. 오직 한민족(韓民族)이 있었을 뿐이다. 물론 체제의 장벽도, 이데올로기의 반목도 없었다. 46년 분단사의 백배도 넘는 반만년동안 연면히 흘러온 배달겨레의 진한 피들이 하나로 섞여 이루어낸 위업에 모두들 감격, 또 감격했다. ... 적어도 그것에는 어떤 꾸밈도 연출도 없었으며 한겨레 한핏줄의 뜨거운 동족애가 존재했을 뿐이다. ...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은 1991년 7월 8일(북한)과 8월 5일(남한) 유엔(UN)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8월 8일 유엔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남북한 유엔가입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다. 이처럼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유엔시대의 「8.15」”라는 제목의 1991년 8월 15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민족의 공동운명. 그것은 유엔시대의 「8.15」가 부여하는 엄숙한 과제다. ...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7천만**을 생각해야 한다. 냉전의 최전방에 섰던 **남북한은 그동안 4천만, 3천만을 대립의 상대로 인식하면서 전체로서의 민족 이익을 잃고 살아왔다.** 그러나 모두의 사고 속에는 **7천만이라는 하나의 민족 단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7천만의 오늘과 내일**을 심사숙고할 때 그 누구도 경솔해질 수 없다. **7천만의 공동운명**은 한반도 전체의 경제와 안보, 국제관계, 철학적 바탕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한다. ... **남북은 버릴 것은 버리면서 손을 잡아야 한다.** ... **남북이 머리를 맞대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후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 최종 승인되고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남북한 당국이 상호 체제 인정과 교류 협력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비록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었지만, 북한과 북한 주민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실례로 “민족 위기 벗어나려는 값진 노력”이라는 제목의 1991년 12월 13일자 『한겨레』 사설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 관계가 ‘적대국’으로부터 **평화공존과 통일을 모색하는 ‘두 체제’**로” 변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인 남북 합의와 과제”라는 제목의 1991년 12월 13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제 남북은 화해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출발점에서 있다. 그것은 **대결이 아니라 협력하는 민족 공존공영의 바탕이 마련됐음을 뜻한다**. 민족공영을 위한 남북의 진지한 노력이 없는 한 모두 역사 앞에 죄인이 되고 만다는 엄숙한 소명을 인식할 때 남북의 정부 간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거듭 깨닫게 된다. 마땅히 **7천만 전체**가 가슴 설레야 될 합의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당국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후 1992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실천에 옮겨 ‘7천만 한민족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1월 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본격적인 ‘남북공존 공영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약 2년여 간 지속된 남북 화해 분위기는 그러나 북한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대립으로 1992년 하반기 들어 점차 교착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1992년 10월 5일 안기부가 발표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북한의 사과를 촉구한 반면 북한은 이를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비난하며 남북한 간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0월 13일 “만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또 다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긴장격화의 길로 나간다면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들이 파탄되고 북남합의서의 이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41)</sup> 결국 12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9차 고위급회담은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1993년 1월 26일 국방부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발표하자 모든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 북한 주민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표상하는 신문 기사는 점차 사라졌으며 북한 주민을 언급하는 사설의 숫자 또한 줄어들었

41)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1년』, pp. 184~187.

다.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김영삼 정부 시기 들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 V. 김영삼 정부 시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99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으며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 한다”라고 주장하며 남북 정상이나 만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sup>42)</sup> 또한 3월 5일 육사 졸업식에 참석하여 치사를 통해 “남과 북은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43)</sup> 그러나 이처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 남북관계는 북한 핵개발 문제와 맞물려 갈등과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기구(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1993년 5월 29일에는 사거리 1,300km에 달하는 노동1호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였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특사교환을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박영수 대표는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sup>44)</sup>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클린턴 행정

42)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요지>,” 『동아일보』, 1993년 2월 25일.

43) “남-북은 통일 번영 동반자,” 『한겨레』, 1993년 3월 6일.

44)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1년』, p. 201.

부는 1994년 5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을 검토하였으나 다행히 미국의 카터(Carter) 전대통령이 6월 15일부터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과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과 일본이 주요 비용을 부담하여 북한 영변에 1,000MW 규모의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건설해주고 중유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제1차 북핵위기는 종결되었다.<sup>45)</sup>

이처럼 제1차 북핵위기가 일단락된 이후 우리 정부는 1995년 6월 당시 기근을 겪고 있던 북측에 쌀 15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을 시사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지원할 2천t의 쌀을 싣고 청진항으로 입항하던 씨아팩스호에 북한이 인공기를 게양하도록 강요한 사건(6월 17일)을 두고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으며, 이후 쌀 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선원이 청진항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억류된 사건(8월 2일), 서부전선 무장공비 침투사건(10월 17일), 충남 부여 무장간첩 사건(10월 24일)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sup>46)</sup> 1996년 들어서도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두고 국내에서는 이념 논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 9월 18일 북한 특수부대원 26명이 잠수함을 타고 강릉에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한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었으나 경색국면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

45) Ibid., pp. 208~213.

46) Ibid., pp. 223~229.

는지 당시 신문 사설을 통해 살펴보자.

우선 이 시기 '북한 주민,' '북한 동포,' '7천만 겨레' 등 북한 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를 수식어나 서술어와 함께 사용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사설의 수는 『경향신문』 54건, 『동아일보』 37건, 『한겨레』 50건을 포함하여 총 141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141건 사설 가운데 북한 주민을 명시적으로 '국민'으로 지칭하며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표상하는 사설은 사실상 북한 국적자 이영순 씨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한 법원 2심 판결 내용을 전하는 "북 동포의 「국적인정」 판결"이라는 제목의 1995년 12월 10일자 『경향신문』 사설 1건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제외한 140건의 사설은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과 남한에 거주하는 '우리,' '우리 국민,' 또는 '온 국민'을 직간접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당수 사설들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을 '우리 동포,' '동족,' '같은 민족' 등으로 지칭하며 '우리 겨레'의 일원으로는 포함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사실은 북한 주민을 '우리 겨레'의 일원으로는 포함하지만,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들을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경향

47)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을 지적하자면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우리 7천만 겨레' 등과 같이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지칭하는 표현의 사용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시기 남북한 주민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7천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설은 '7천만 민족'을 언급한 사설 4건, '7천만 겨레'를 언급한 사설 1건, '7천만 동포'를 언급한 사설 1건, '7천만 경제공동체'를 언급한 사설 1건, 기타 2건을 포함해 9건에 불과하다. 이와 동시에 이전 시기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종종 사용되었던 '4천만 국민'이라는 표현의 사용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아마도 대한민국 인구가 1984년 처음 4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1990년 약 4천 3백만 명으로,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1998년에는 약 4천 6백만 명으로 증가하여 '4천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해진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한국 사회 내에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 겨레’의 일원이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 남북단일팀이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성사되는 등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당시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주요 이미지는, 북한 정권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남아있었던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족의 동반자’이자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의 이미지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문제로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1994년 3월 19일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5일자 “아직도 경계의 상대”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당시 분위기를 잘 드러내준다. 이 사설에 의하면

북한은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예비접촉과 해외공관장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놓고 전쟁위협을 했다. 또 **주민들에게 한국 내 주요 공격목표를 주지시키고 밤에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등 금방 전쟁이 터질듯 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협력과 교류의 상대」로 봐온 북한을 아직은 「경계의 상대」로 보고**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냉전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북의 집단 통곡을 보며”라는 제목의 1994년 7월 12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북한 주민의 조문 행렬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집단 통곡에서 보여준 북한의 일사불란한 주민동원체제와 폐쇄적인 획일사회의 경직성이다. 통제된 사회에서 억눌렸던 감정을 일시에 폭발·승화시키는 저 집단적 카타르시스 현상이 자칫 공격적인 양상으로 확산되면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집단 통곡현상에서 김일성 유일 체제의 실상이 어떤 것이며 개인 승배의 그늘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오랫동안 세뇌된 북한 주민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한 핏줄을 나눈 남북동포가 한자리에 만나 얼싸안기만 하면 아무 것도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식의 생각은 북의 실체를 제대로 읽지 못한 안이한 감상주의적 접근일 뿐이다.

이처럼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보수적 입장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제기하며 감상주의적 접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한겨레』는 진보적 입장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 좀 더 포용적인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겨레』는 1995년 5월 26일 북한이 일본에 쌀 공급을 공식 요청하면서 북한 식량난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불거진 이후, 그리고 곧이어 8월 23일 북한이 유엔에 수재긴급구호 요청을 하며 수해 피해가 알려진 이후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약 30여건 이상의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48)</sup> 실제로 “쌀 지원

<sup>48)</sup> 이 가운데 일부 사설의 제목을 소개하면 “수해 입은 북한 동포를 돕자”(1995년 9월 4일), “북한에 참다운 수해 구호를”(1995년 9월 16일), “북한 수해는 민족 차원에서”(1995년 9월 21일), “실망 안겨 준 남북 쌀회담 자세”(1995년 10월 3일), “북한 수재민 돕기에 나서자”(1995년 12월 26일), “대북지원 정부가 나서야 한다”(1996년 1월 17일), “대북정책 열린 자세로”(1996년 1월 25일), “굶주리는 동포 외면말아야”(1996년 3월 14일), “북한 참상 보고만 있을 것인가”(1996년 5월 4일), “북한 수재민을 돕자는데”(1996년 5월 28일), “「동포애」 전달까지 막아서야”(1996년 6월 1일), “쌀은 왜 안되는가”(1996년 6월 12일), “북한 수재민도 도와야 한다”(1996년 8월 12일), “북한 돕기 식량은행”(1997년 1월 23일), “식량 지원 더 이상 늦춰선 안돼”(1997년 3월 24일), “쌀 지원 정부가 나서라”(1997년 4월 1일),

정부가 나서라”라는 제목의 1997년 4월 1일자 사설은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상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말로 이루 다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  
가 싶다. 굶주림을 면하려고 나무 껍질을 먹고 장출혈이 생겨 병원을 찾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고 있다고 한다. ... 양상하게 야윈 다리, 살도 윤기도 없  
는 피부, 빛깔마저 변해가는 머리카락이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가 직접 대북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 동포의 식량난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겨레』 신문의 논조와 달리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보  
수적 입장에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  
러 건의 사설을 통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부의 신중한 대북 지원  
을 촉구하였다. 실례로 “북경의 쌀 회담을 보고”라는 제목의 1995년 6월  
22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는 남북  
의 동포애나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아무런 반대가 없었고 북경의 남북한  
쌀회담도 모두가 지지했다. 남북의 동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서로 도와  
주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 [그러나] 돕겠다는 측이 오히려 답답해하는 기이  
한 형태의 협상이었다. ... 「주면서도 사정해야 하는 식」의 협상이 더는 없기  
를 바란다.

---

“동포 참상 외면말라”(1997년 4월 15일), “북한동포 돕기 왜 막나”(1997년 4월 17일),  
“굶주린 동포 돕기 막지 말라”(1997년 4월 29일), “북녘에 옥수수를 심게 하라”  
(1997년 5월 8일), “민족공동체 위한 통일 농정을”(1997년 6월 13일), “북녘돕기,  
정부도 외면말라”(1997년 6월 23일), “숨겨가는 북녘 어린이들”(1997년 6월 27일),  
“자율적 대북 지원 허용하라”(1997년 7월 16일), “북녘 동포를 생각하자”(1997년  
10월 14일), “말레이시아도 북한을 돕는데”(1997년 11월 17일) 등이 있다.

특히 씨아팩스호 인공기 계양 강요 사건(6월 17일), 삼선비너스호 선원 억류 사건(8월 2일), 충남 부여 무장간첩 사건(10월 24일) 등이 이어지고 외신을 통해 대북 지원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보수 신문은 북한에 대한 “배신감”을 나타내며 정부에 군량미 전용 방지 대책과 분배 투명성 확보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sup>49)</sup>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실례로 “외면 못할 북의 기아실상”이라는 제목의 1997년 6월 20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김정일 정권을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sup>50)</sup>

49) 이 시기 쌀 지원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 자세를 비판하며 정부의 신중한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경향신문』 사설로는 “남북의 성사 노력에 달렸다”(1995년 5월 28일), “쌀과 인공기와 밀입북”(1995년 6월 30일), “당당한 대북자세가 아쉽다”(1995년 7월 2일), “북송 쌀에 「한국산」 명기하라”(1995년 7월 12일), “쌀 회담의 마지막 선택”(1995년 7월 18일), “삼선 비너스호의 교훈”(1995년 8월 14일), “대북 수해지원의 「조건」”(1995년 9월 15일), “군량미로 전용 사실인가”(1995년 12월 12일), “북한 식량난 과연 심각한가”(1995년 12월 28일), “북의 전쟁 준비와 인권 상황”(1996년 5월 29일), “대북 쌀지원, 상황과 원칙”(1996년 6월 8일), “뒷맛 개운치 않은 대북 지원”(1996년 6월 12일), “군량미로 쓰인 대북 지원쌀”(1996년 6월 26일), “온정 대가가 무장간첩인가”(1996년 9월 19일), “북군비중강은 배신 행위”(1996년 10월 29일), “대북 식량지원의 최소 조건”(1997년 3월 29일), “북, 조그만 성의라도 보여야”(1997년 4월 19일), “구호 손길 걷어차는 북한”(1997년 7월 19일), “구호 식량, 직접 분배해야”(1997년 8월 15일) 등이 있다. 또한 비슷한 논조의 『동아일보』 사설로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1995년 5월 28일), “북경의 쌀 회담을 보고”(1995년 6월 22일), “북한으로 가는 쌀”(1995년 6월 26일), “또 무장 간첩인가”(1995년 10월 26일), “대북 쌀 추가지원의 조건”(1996년 1월 9일), “유엔의 식량지원과 책무,”(1996년 6월 8일), “북한 식량지원 하긴 해도”(1996년 6월 12일), “북한에 준 쌀 어디로 갔나”(1997년 6월 27일), “북한 굶주림 면하려면”(1997년 4월 2일), “북한군이 빼간 원조식량”(1997년 6월 1일), “군량미가 된 구호 식량”(1997년 10월 18일) 등이 있다.

50) 실제로 위 각주 48)에 언급한 대부분의 사설들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협조적

북한의 기아 참상은 시계 바늘을 수천년전의 원시 시대로 되돌려 놓은 듯한 착각마저 들게한다. ... 마치 전염병과 빈곤에 찌든 아프리카 르완다를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다름 아닌 **우리 동포들의** 모습이다. ...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기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비록 수재를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들도 한반도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식량이 **우리 동포**에게 직접 전달되는지에 유의하면서 **그들**을 돕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굶어죽어가는 동포들을 방치한 채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 그러나 당장 시급한 것은 북한 수재민들을 아사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 북한”이라는 제목의 1997년 6월 20일자 『동아일보』 사설 또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버”린 “북한 지배자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회령시 근처 농가의 참상도 눈뜨고 볼 수 없다. 칼로 잘게 썬 풀 한 움큼에 밀가루 두 숟가락을 넣어 끓인 풀죽이 네 사람의 한끼 식사라면 누가 믿겠는가. 바가지에 절반 가량 담긴 밀가루가 네 식구 보름치 식량이라고 한다. 북한 식량난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처럼 극에 달했으리라고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굶주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됐다. ...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인도적인 식량지원**은 **계속하되** 이것이 북한 곳곳의 주민들에게 적은 양이나마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으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동포들이 다 굶어죽고 난 뒤 통일은 해서 무얼 하겠는가. ... 저들에게 퍽박받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이다. 통일이 된 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북한동포를 구해야한다. 그들을 저 지옥에 저대로 놓아둬서는 안된다.**

---

자세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는 각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북한 정권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세 신문 모두 이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북한 주민을 ‘굶주림에 시달리는 존재’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구호의 대상’으로 표상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 VI. 결론

지금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기를 거치며 북한 주민을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해 왔는지, 특히 이들을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 포함해 왔는지 배제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 북한 주민의 ‘국민’ 여부와 관련하여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약 20여년의 기간 동안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이미지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국민’으로 표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북한 주민을 언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신문 사설들은 ‘북한 주민,’ ‘북한 동포’ 등을 ‘그들’로 호칭하며 ‘우리,’ ‘우리 국민,’ ‘온 국민,’ ‘국민 모두’ 등과 대비시킴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우리’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 상당수 사설들은 ‘6천만 겨레’라는 표현을 남한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반면 ‘우리 국민,’ ‘4천만 국민,’ ‘온 국민’ 등의 표현은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두 범주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을 ‘우리 겨레’이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제3의 존재’로 표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로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 북한 주민을 언급하는 사설들 또한 ‘6천만 겨레,’ ‘7천만 겨레’라는 표현을 남북한 주민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반면 ‘우리 국민,’ ‘4천만 국민,’ ‘온 국민’ 등은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두 범주를 구분하고 북한 주민을 후자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약 20여년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을 언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설이 북한 주민을 ‘우리 겨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제3의 존재’로 표상해 왔다는 사실은 강원택이 언급한 ‘대한민국 민족주의,’ 즉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구분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이 시기에 이미 한국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시사한다.<sup>51)</sup>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는 ‘우리 겨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제3의 존재’로서 북한 주민의 구체적 이미지가 남북관계와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함을 보여준다. 우선 남북한 간 적대적 대립 관계가 지속된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이미지는 ‘북괴’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남북한 사이에 전쟁 등이 다시 발발할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즉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7 선언〉을 통해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선언하고 이후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단일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승,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이어지며 교류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민족의 동반

51)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p. 38;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pp. 30~31.

자'이자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자' 이미지 또한 1993년 3월 시작된 제1차 북핵위기로 남북한 사이 대립이 심해짐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1994년 3월 19일 남북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남북한 간 전쟁위험이 고조되자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이미지는 다시 한 번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로 제1차 북핵위기가 일단락되고 1995년 들어 북한의 식량난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굶주림에 지친' 북한 주민의 처참한 현실이 외신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자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이미지는 '우리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와주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구호해야 할 대상'으로 점차 변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이미지 변화, 즉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과 '우리가 구호해야 할 대상'으로의 이미지 변화는 단선적인 것은 아니며 때때로 다양한 이미지가 동일한 시기에 혼재되어 존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문사의 이념적 입장에 따라 특정 이미지가 과도하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는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구체적 이미지가 남북관계와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나타난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선 첫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겔너(Gellner)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문화적 단위인 민족의 경계와 정치적 단위인 국가의 경계 사이의 일치를 요구한다.<sup>52)</sup> 이러한 겔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북 분단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민족주의

<sup>52)</sup>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1.

원칙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된 상태로, 즉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또는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해 온 ‘한민족’이 실질적으로 남과 북에서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분단으로 민족주의 원칙 실현이 좌절된 상태에서 민족주의 원칙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남과 북이 통일을 이뤄 통일 국가를 세우는 방안이고, 즉 민족의 경계에 맞춰 국가의 경계를 변경하는 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국가의 경계에 맞춰 각각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여 민족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분단 직후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정부는 이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전자의 방안을 통해 민족주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고 남한의 이승만 정권 또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루바빠 북진해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sup>53)</sup>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냉전 질서 하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했다. 분단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민족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필요했다. 위의 논의는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뒤이은 분단 고착화 과정을 거치며 민족주의 원칙 실현이 좌절된 상태에서 한국 사회가 분단된 국가의 경계에 맞춰 북한 주민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상상’함으로써, 즉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분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상상’함으로써 민족주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시도하였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 민족주의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단일민족 민족주의’의 영향 하에 ‘남북한 동포를 모두 단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하나의 단일민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최소 1990년대까

<sup>53)</sup> Kim, “Are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 pp. 164-165.



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실례로 신기욱은 단일민족 민족주의의 영향 하에 한국 사회가 최근까지도 북한 주민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를 '한민족'에 속하는 '한국인'으로 간주해 왔다고 주장한다.<sup>54)</sup> 위의 논의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이미지가 '우리 겨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닌 '제3의 존재'로 표상되며, 남북관계와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경계해야 할 대상,' '협력해야 할 대상,' '구호해야 할 대상' 등으로 계속 변화해 왔음을 보여줌으로써 '단일민족 민족주의' 내부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추적하며 살펴볼 계획임을 밝혀둔다.

■ 접수: 2019년 10월 31일 / 심사: 2019년 11월 25일 / 게재확정: 2019년 11월 25일

---

<sup>54)</sup> G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2~4.

**【참고문헌】**

-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 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pp. 15~38.
- .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 이내영 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pp. 11~31.
- 국가기록원.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과 한국위원단 설치.” <http://theme.archives.go.kr/next/unKorea/approvalKorea.do>, 2019.
-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2호 (2011), pp. 129~153.
- 김기동 · 김효빈 · 정재도 · 오건영 · 엄광용 · 이재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제2호 (2018), pp. 1~36.
- 대법원.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 손애리 · 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권 3호 (2012), pp. 5~34.
- 신미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5권 2호 (2009), pp. 119~143.

- 심지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통일정책.” 『통일시론』, 7월 (1999), pp. 167~179.
- 윤인진 · 김춘석 · 김석향 · 김선화 · 김화순 · 윤여상 · 이원웅 · 임순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4.
- 윤인진 · 송영호. “북한이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 『재외한인연구』, 제30호 (2013), pp. 7~40.
- 윤인진 · 채정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 이정철.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2012), pp. 130~161.
- 이효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2011), pp. 1~36.
- 정동준.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국민정체성.” 정동준 외 8인.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p. 164~191.
- 정진아.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 <남북청년통일실험-어서 오시라요>에 대한 악성댓글 사건.” 『민족문화연구』, 76권 (2017), pp. 164~191, 281~311.
- 최윤형 · 김수연.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 준 적이 없어요: 댓글에 나타난 남한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공 PR의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15권 3호 (2013), pp. 164~191, 187~219.
-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년~2011년』.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북총리회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318>. 2019.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Em, Henry H. *The Great Enterprise: Sovereignty and Historiography in Modern Kore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3.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Kim, Bumsoo. “Are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 The Trifurcation of Ethnic

- National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Syngman Rhee Era (1948-1960).” *Journal of Korean Studies*, v. 24, no. 1 (2019), pp. 149~171.
- Schmid, Andre.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 Shin, Gi-Wook.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https://undocs.org/en/A/RES/195\(III\)](https://undocs.org/en/A/RES/195(III)), 2019.

Are North Korean Residents 'Our Co-nationals'?  
: Korean Nationalism and the Boundary of Koreans  
in the 1980s and 1990s

Kim, Bumss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nalyzing editorials of three Korean newspapers, *Kyŏnghyangsinmun*, *Tongailbo* and *Hankyŏre*, this study traces the changes of North Korean residents' images represented in South Korean society during the Chun Doo Hwan, Roh Tae-Woo, and Kim Young-Sam presidencies. As well know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hich stipulates that "the territory of the ROK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its adjacent islands," the ROK government has treated all North Korean residents legally as ROK nationals. Contrary to the ROK government's position as such, however, the trend to regard North Korean residents as ROK nationals seems to diminish in everyday life in recent years. By analyzing editorials of *Kyŏnghyangsinmun*, *Tongailbo* and *Hankyŏre* from September 1, 1980 to February 24, 1998, this study reveals that, though being included in ethnic Korean nation, North Korean resident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boundary of 'our ROK nationals' and represented as a 'third person.' Furthermore, this study reveals that the image of North Korean residents represented in the newspaper editorials has

changed from one of ‘those we should raise our guard against’ to one of ‘those we should cooperate with,’ and to one of ‘those we should provide with relief.’ In doing so,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with the consolidation of the division of Korea, Korea’s ethnic nationalism has been diversified into various versions.

Keywords: North Korean residents, Ethnic Identity, National Identity, the Division of Korea, Nationalism, Inclusion and Exclusion

김범수(Kim, Bumsoo)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Bringing Class Back In: The Changing Basis of Inequality and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Ethnic and Racial Studies*, 31(5), 2008, pp. 871~898; “Are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 The Trifurcation of Ethnic National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Syngman Rhee Era (1948-1960),” *Journal of Korean Studies*, 24(1), 2019, pp. 149~171; “칸트의 자유 개념과 평화론: 국가의 자유와 국제 공법의 양립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9(3), 2019, pp. 7~54 등이 있다. 2009년 『한국정치학회보』 43(1), pp. 177~202에 게재한 “국민의 경계 설정: 전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